

ALL RANGE MOCK EXAM

지방7급 동형모고

2026 김중규 선행정학

PREFACE

「2026 김중규 지방7급 동형모의고사 선행정학」을 펴내며

“실전은 결국 실전으로 완성됩니다.”

시험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동형(전범위) 실전모의고사입니다.

2026 김중규 지방7급 동형모고 선행정학 교재는 국가7급 동형모고 문제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본모의고사 6회분과 심화모의고사 6회분, 총 12회분의 실전모의고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본 모의고사(PART 1)에서는 지방7급 출제경향에 맞는 기본 핵심 유형을 통해 실전 감각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빈출되는 대표기출 지문 위주로 엄선·구성하였고, 심화모의고사(PART 2)에서는 신경향 고난도 응용문제와 실무형 법령문제 및 최신 출제 포인트를 반영, 난이도를 약간 높여 실제 시험 이상의 긴장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PART 2의 경우 문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기서 틀린 문제는 시험장에서 맞힐 문제”라는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의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힌 지식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12회의 실전 동형모의고사를 한 회 한 회, 한 문제, 한 문제 진지하게 풀고, 철저히 복기한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시험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합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와 반복된 실전훈련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도전정신 뿐입니다.

2026 지방7급의 최종 승자는, 실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확신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07. 27.
카스파 연구실에서 저자

김 중 규

모의고사

기본 모의고사 문제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기시험

| 행정학 |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제4과목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문제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안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5.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가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한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정답공개 및 가산점 등록 안내

1. 정답공개 : 정답가안 ○.○.(토) 13:30, 최종정답 ○.○.(월) 18:0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 이의제기 : ○.○.(토) 18~00 ~ ○.○.(화) 18:0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은 정답가안 공개 시 공지 예정
3. 가산점 등록기간 : ○.○.(토) 13:00 ~ ○.○.(월) 21:00
가산점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원서접수 → 가산점 등록/확인]



제 1 회 기본 모의고사

01 베버(Weber)가 주장했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 ㄴ.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한다.
- ㄷ.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 ㄹ.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ㅁ.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02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03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04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의미와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 ④ 비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제 6 회 심화 모의고사

01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황론적 조직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을 찾고자 한다.
- ② 조직경제학의 일종인 대리인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은 존재하지만 상황조건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리손실을 줄이고자하는 유인구조를 찾고자 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은 임의론의 입장이므로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데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조직군생태론은 왜 어떤 조직은 존속·발전하고 어떤 조직들은 소멸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환경적합도에서 찾고자 한다.

02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행정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해책임법(Liability Law)은 특정 공공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이다.
- ② 바우처(Voucher)는 특정 개인이 한정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행위이다.
- ③ 직접대출(Direct Loan)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감면해주는 행위이다.
- ④ 보험(Insurance)은 정부가 민간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보증하는 행위이다.

03 코헨, 마치 및 올슨(Cohen, March & Olsen)이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인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의사결정은 문제들, 해결책들, 참여자들, 선택 기회들이라는 네 가지 흐름들이 순차적으로 결합되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다.
- ② 문제들(Problems)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관심사이며, 하나의 해결책(Solution)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산물로서 이미 존재하는 답이다.
- ③ 참여자들(Participants)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며, 그러한 유입의 정도는 참여자의 시간과 관심에 따라 변동한다.
- ④ 선택 기회들(Choice Opportunities)이란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대되는 순간들이다.

0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에는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대통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등에 대한 임용권 등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한다.
- ③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한다.
- ④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심화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정답

제5회 심화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①
06	③	07	③	08	③	09	③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①	15	③
16	③	17	③	18	①	19	③	20	①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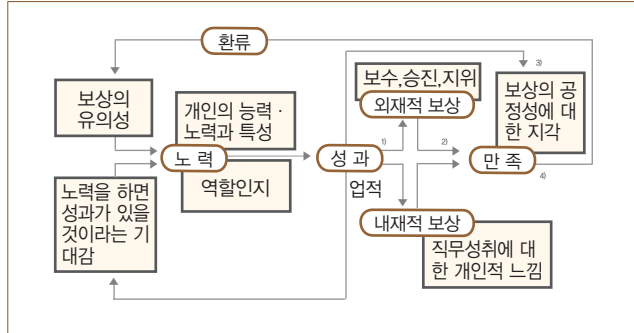
★★

④

반대이다. 결국 동기부여는 **노력** ⇒ **성과** 또는 **업적** ⇒ **만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종래의 욕구이론이 만족 ⇒ 업적향상의 관계를 보인 반면, 업적만족이론은 노력 ⇒ 업적 ⇒ 만족의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근무성과(업적)는 직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보상의 공평성이나 구성원의 특성(traits) 및 역할인지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Vroom의 기대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다.

- ☑ ① [o] 근무성과(업적)는 직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보상의 공평성이나 구성원의 특성 및 역할인지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Vroom의 기대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다.
- ② [o] 노력이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업적달성 노력을 결정하고 이 결과로 업적이 달성된다.
- ③ [o] 만족은 업적달성으로 얻게 될 내재적·외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로부터 나온다.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1) 직무성과는 외재적·내재적 보상을 가져오지만 이 관계는 불완전하게 연결된다.
- 2) 실제 보상은 물론 기대보상도 만족에 영향을 준다.
- 3) 보상은 공평하다고 지각되어야 하며 내재적 및 외재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 4) 만족은 성과와 환류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 업적이 만족을 가져온다는 이론

02

★★

①

내부집단모형이란, 정책담당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이루어지는 모형으로, 관료집단 내부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음모형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행정부** 및 **공공의제** 형성 등의 **과정**이 생략되어 은밀히 정책과정이 진행된다. 정부홍보(공공관계캠페인)를 통해 공공의제로 확산되는 모형은 **동원모형**이다.

- ☑ ② [o] 동원모형에서는 민간에서의 공공의제화 전, 정부 내 정책결정자(정책담당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한 후 PR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공의제화시키는 행태가 나타난다.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의제

를 형성하기 어려운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③ [o]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문제를 제기하면 → 민간부문에서 공공의제가 형성되고 →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다원주의식의 의제설정 과정을 말한다.
- ④ [o] P.May가 제시한 공고화모형(굳히기형)이란, 대중적 지지가 이미 광범위하고 높게 형성된 경우 국가가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P.May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주도자\대중지지	높음	낮음
사회적 행위자들	외부주도형 ¹⁾	내부주도형(내부집단형) ²⁾
국가	굳히기형	동원형 ³⁾

1) 외부주도형: 외부집단이 정상적 정치과정 및 심볼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슈화

2) 내부주도형: 특별한 관심집단에 의해 주도

3) 동원형: 공공관계(캠페인)를 활용하여 국가가 이슈화

03

★★★

③

ㄴ, ㄷ, ㄱ만 맞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 ㄱ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의무가 되었고, 국민참여예산도는 2018년 법정화
- ㄴ [o] 총액계상예산제도는 중앙정부에는 도입되어 있지만, 지방정부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 ㄷ [o]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중앙정부는 2022년 도입하였지만, 지방정부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 ㄹ [x] 예산성과금제도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였다.
- ㅁ [x] 총액(기준)인건비제도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였다.
- ㅂ [x]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였다.
- ㅅ [o] 중앙정부는 감사원의 결산확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방정부결산 감사에는 감사원이 개입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이 결산을 검사한다.
- ㅇ [x]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정부에만 도입되어 있다.

국가행정제도와 지방행정제도의 비교

분야	제도	국가	지방
인사	고위공무원단제도	실시	미 실시
	개방형직위제도	실시(실·국장급은 20% 이내, 과장급도 20% 이내)	실시(시·도는 1~5급의 10%, 기초는 2~5급의 10%)
	공무직위제도	실시	실시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부처별 총정원 직제로 규정·통제)	실시(총액인건비제 ⇨ 기준 인건비제)
	국정감사(지방은 행정감사)	정기회 이전 30일간 실시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
재정	예산일정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	광역 50일 전 제출, 15일 전 의결(기초는 40일, 10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실시	실시
	조세지출예산서	실시(2011)	실시(2010부터), 지방세지출 보고서
	성인지예결산서	실시(2010)	실시(201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실시(2022)	미 실시
	예비비 법정상한선	있음(일반회계 총액의 1/100 이내) - 임의사항	있음(일반회계 총액의 1/100 이내) - 의무사항
	추가경정예산제도	실시 편성사유: 제한 ○ 확정전 사용: 불가	실시 편성사유: 제한 x 확정전 사용: 일부경비 가능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긋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6년 8월 10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루미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